

주택 태양광 자재 조달청서 구매한다

(태양광 발전 모듈·인버터)

이달 초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제품 가격 투명성 제고 기대

정부의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을 통해 태양광을 설치하는 소비자와 시공업체는 조달청의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제품을 선택해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달 초 태양광 발전 모듈과 인버터 품목이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면서다. 정부는 올해부터 정부 보조사업을 통해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조달청 쇼핑몰에서 모듈과 인버터를 구입하도록 의무화했다.

태양광 발전 모듈과 인버터가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것은 지난 5일이다. 새로 열린 종합쇼핑몰에는 '태양광 발전 모듈'과 '인버터' 항목이 각각 생성됐다. 이제 수요기관으로 등록된 232개 참여 시공업체들이 쇼핑몰을 통해 제품 조회 후 구매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6월 12일 기준으로 쇼핑몰에 물품을 등록한 모듈 업체는 탑신, 한솔테크닉스, 한화큐셀코리아다. 인버터를 등록한 업체는 금비전자, 한솔테크닉스, 동양이앤피다. 한국에너지공단 측은 "현재 3개씩 등록된 업체 외에도 쇼핑몰 등록을 준비하는 업체들이 있다"며 "모듈은 최대 9개 업체, 인버터는 6개 업체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주택 태양광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업체들은 자유롭게 모듈과 인버터를 선택할 수 있었다. 하지만 태양광 설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비자가

모듈과 인버터의 정확한 가격을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자재 비용을 이유로 시공비가 과도하게 책정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공단에서는 주택 태양광 사업의 주요 자재인 모듈과 인버터를 조달청에서 구하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막상 조달청 의무구매 사항은 실행하기에 간편한 조치는 아니었다. 조달청에서 자재를 구매할 수 있기까지 예정보다 한 달가량이 더 걸렸는데, 이는 일차적으로 제조업체들이 조달청 제품 등록을 꺼렸기 때문이다. 업체들은 제품 가격이 조달청 쇼핑몰에 공개되는 점을 부담스럽게 여겼다. 조달청에 등록된 같은 제품으로 민수시장에서 판매를 해야 하는 업체 입장에서 제품 가격 공개가 영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로 인해 업체에서는 보조사업 시장에 뛰어들지를 망설이거나 다른 업체가 먼저 조달청 쇼핑몰에 등록해 가격을 노출하기를 기다리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조달청의 쇼핑몰 등록 절차의 과정과 기간이 길었다는 점도 걸림돌이었다.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조달청과 업체 간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계약)를 맺어야 한다. 연간 납품실적이 3000만원 이상인 업체가 최소 3개 이상 모여야 해당 품목에 대한 쇼핑몰이 구축된다는 것도 또 다른 장벽이

었다. 더해서 제품의 가격이 합리적인지에 관해 조달청과 업체 간 논의를 거치는 '가격협상' 단계에서도 시간이 더디게 걸렸다.

김유진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보급실 부장은 "가격협상은 제조업체와 조달청 간의 협의 사항으로 공단이 나설 수 없는 부분이었다"며 "업체의 영업이익과 직결되는 부분이기도 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사업이 예상보다 지연됐지만 소비자가 모듈과 인버터의 가격을 파악하고 비교·결정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유진 부장은 "조달청 쇼핑몰 등록에 제조업체들을 등록하는 기간이 예상보다 오래 걸렸지만, 소기의 목적인 제품의 가격 투명성 제고는 달성했다"며 "모듈·인버터 가격 후려치기 등의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제도 시행으로 제조업자는 제품 가격 공개, 시공업체의 경우 사업 지연을 겪은 만큼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 부장은 "이번 제도는 소비자의 권익 실현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제조기업과 시공업체의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각 이해 관계자들의 입장을 파악하고 이후 불편한 부분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예지 기자 kimyj@

물관리 '일원화'...홍수관리체계 '출범'

환경부, 홍수상황실·한강홍수통제소 주관 재난 대응 역량 점검·기관간 협력 모의훈련

최근 물관리 일원화로 홍수상황실이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전되면서 재난 대응 역량 점검과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모의훈련이 실시됐다. 환경부는 '어름철 자연재난 대책 추진단' 내 홍수상황실을 신설해 기상·홍수상황 관리와 더불어 보고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홍수관리를 위해 환경부 홍수상황실과 국토부 내 하천계획과, 지방국토청 하천국 간 협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12일 오후 2시부터 국토교통부, 기상청, 지자체 등 9개 기관과 함께 '홍수해(태풍·호우) 재난 대응 모의훈련'을 서울 동작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의훈련은 지난 8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환경부가 물 관리의 지휘본부 역할을 맡은 이후 한강홍수통제소 등 홍수관리 기능과 조직이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처음으로 실시한 훈련이다.

환경부는 이번 훈련에서 환경부 중심의 홍수관리체계를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모의훈련은 한강수계에 집중적으로 비가 많이 내려 발생하는 홍수상황을 가정해 진행되는 것으로, 이날 훈련에서는 한강수계

홍수특보 발령·하천시설 피해 발생 시 환경부의 총괄 지휘로 댐 운영 등을 통한 홍수 방어 과정을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수행하고 재난상황 정보의 전파·공유체계를 점검했다.

이날 훈련에는 환경부 홍수상황실과 한강홍수통제소가 주관, 국토교통부 소속 하천관리청과 기상청, 피해발생 지자체, 댐의 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9개 기관이 공동으로 훈련에 참여했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홍수관리를 총괄하는 환경부와 하천관리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가 하천시설 피해정보를 신속히 공유하는 훈련을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이 밖에 낙동강, 금강, 영산강 수계의 홍수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도 각각 낙동강·금강·영산강 홍수통제소가 주관이 돼 이달 20일까지 지방국토관리청, 지자체 등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물관리 일원화로 이관된 홍수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각종 재난대응 설명서(매뉴얼) 개정을 진행 중이며, 홍수상황 관리체계도 개편하는 등 차질없는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예지 기자

에너지공, 농가태양광사업 정책금융지원 설명회

시공업체·에너지 유관기관 등 대상 추진방향 소개

농업인과 축산인, 어업인 등이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금융 정보를 공유하는 장이 열렸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상홍)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와 함께 12일 충남 아산 온양그랜드호텔에서 시공업체 및 에너지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2018년 농가태양광사업 정책금융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농가태양광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축산인, 어업인 포함)에게 장기저리 정책자금 융자(평균이자 1.75%,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시설투자비의 90% 이내)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

치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해 농업인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꾀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2030년까지 발전량의 20%를 재생에너지로 채운다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하고 48.7GW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설비 목표의 20%에 해당하는 10GW는 농가태양광 설비에 해당한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농가태양광사업은 정부의 정책금융(융자) 지원 확대로 참여농가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4월 기준으로 농가태양광은 올해 1865호 가구가 참여해 지난해 322건에 비하면 3배가량 증가했다.

이번 설명회는 시공업체, 에너지 유



12일 충남 아산 온양그랜드호텔에서 시공업체, 에너지 유관기관 등 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농가태양광사업 정책금융지원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관기관 등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올해 농가태양광사업 추진현황과 정책금융지원 계획, 시공사례를 소개하고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공단과 산업부는 농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 확대를 우려되는 농지축소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농업활동과 태양광발전

사업의 기본개념과 시범 도입에 대해 안내했다.

공단 관계자는 "정부 정책의 성패는 국민들의 공감과 참여에 달려 있다"며 "앞으로 보다 많은 농가들이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해 새로운 농가수익을 창출하고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충남=김예지 기자

경남도, 탄소포인트제 아파트 단지 가입 확대 추진

인센티브 지급기준 완화...전기절감률 8% → 5%

경남도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생활 속 온실가스 줄이기 확산을 위해 "탄소포인트제 단지 인센티브 지급 기준을 완화(전기 절감률 전년 대비 8% → 5%)하는 등 탄소포인트제 아파트 단지 가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탄소포인트제'는 참여자가 자발적인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에너지 절감을 통해 감축된 이산화탄소량을 포인트로 환산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프로그램이다. 2009년 개인 가입을 시작으로 2015년에는 단지가입으로 확대 시행했으며, 2017년 말 기준 16만3623세대, 477단지가 가입했다.

단지가입 인센티브 지급대상은 15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이며, 오는 6월 30일까지 신규로 가입하는 아파트 단지는 향후 1년간 전기 사용량이 기준사용량보다 5% 이상 절감된 경우, 단지 전체 온실가스 절감률과 개인참여율(단지 세대수 대비 개인가입 세대수)에 따라 100만 원에서 최대 600만 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윤재현 기자 mahler@

경기도 북부회가 앞장서겠습니다!

"CLEAN 경영·윤리경영" 실천!

부실공사 추방! 불법하도급 근절!
입찰질서 확립! 거짓실적 퇴출!



□ 도회 윤리위원회의 'CLEAN 경영' 다짐 결의 (2018. 5. 24)

KCE 한국전기공사협회 경기도 북부회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489 5층(의정부동) TEL 031-877-8090~1 FAX 031-877-8098